
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

-국세청 개청 60주년, 국세행정 大도약의 원년-

2026. 1. 26.



목 차

I . 그간의 추진성과	1
II . 중점 추진과제	2
1.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	2
2.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	3
3.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	5
4.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	8
III . 추진 기반	10

I. 그간의 추진성과

1. 공약이행을 위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노력

- (세입예산 확보) 성실신고 지원, 고액채납자 징수활동 강화 등 다각적 세수확보 노력으로 전년 대비 세수 증가 및 진도비(추경예산 기준) 상승
* '25.11월(누계) 소관 세수 345.6조원(전년대비 37.2조원 ↑), 진도율 95.3%(전년대비 1.4%p ↑)
- (성실신고 지원) 맞춤형 도움자료 확대*, 인적공제 자기검증시스템 및 부가세 AI 상담 도입 등 납세자 중심 신고환경 구축하여 자발적 신고 유도
* (부가) ^{24년}276만명 → ^{25년}302만명, (소득) ^{24년}115만명 → ^{25년}119만명

2.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

- (자금 유동성 제공)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 지급, 납부기한 연장, 납세담보 면제* 등으로 자금부담 완화
* '25.7월 신청분부터 '26.12월까지 납세담보 면제기준 7천만원 → 1억원 상향 적용
- (납부수수료 인하)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,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절반 이하로 인하하여 국세 납부 부담 축소
* 당초 0.8% (체크 0.5%) → 일반 0.7% (체크 0.4%), 영세 0.4% (체크 0.15%)
- (피해사업자 지원) 티몬 피해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손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세법해석을 적극 요청, 환급금 조기 지급
* (지급대상) 339명 (환급규모) 150억원, 미신청자는 경정청구 개별 안내

3. 공정경제를 훼손하는 탈세자 엄단

- (불공정 탈세 엄단)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불공정 자본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사회 전반에 '공정'의 가치 확산
* 생활물가 밀접업종,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,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등
- (부동산 탈세 차단) 초고가주택 거래, 외국인·연소자 주택취득 자금 출처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집중 검증하여 비정상 거래 척결
*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, 담보대출·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 등
- (초국가범죄 대응) 캄보디아 스캠 범죄 연계 국내 업체에 대한 적시 세무 조사착수 및 범죄수익 은닉 국가의 금융정보*를 확보하여 피해확산 방지
* 한국인 계좌정보를 탈루혐의 검증에 활용

Ⅱ. 중점 추진과제

1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 확보

가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

- (세입예산) '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'25년 추경예산(362.6조원) 대비 +19.1조원 증가한 381.7조원

구분	'25년 추경예산	'26년 예산	'25년 추경 대비
국세청 소관	362.6조	381.7조	+19.1조
총국세	372.1조	390.2조	+18.1조

- (관리방향)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진납부세수를 극대화하고, 치밀한 신고내용확인,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

나 납세편의 향상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뒷받침

- (신고안내 강화)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지속 확대하고,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·감면항목은 「절세혜택 도움자료*」로 별도 안내
* (예) 청년이 감면 업종으로 창업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내
- (납세편의 제고) 국민비서*를 통해 국세 조회·납부 및 환급금 조회·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 추진
* 행안부 통합 알림 서비스로 카카오톡 등 민간앱 18종 채널을 통해 안내
- (신고오류 방지) 신고서 제출 전 오류 사항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「신고오류 검증서비스」 보완 및 확대

다 소송대응 강화로 정당한 과세권 수호

- (대리인 보수 상향) 초고액·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, 민간수준에 상응하도록 수입료 한도 대폭 상향*
* (기존) 수의계약방식, 한도 5천만원 → (개선) 공개경쟁방식, 한도 10억원
- (민사소송 확대) 악의적 재산은닉 및 강제징수회피 수법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검토 기준금액 하향(체납액 5천만원 → 3천만원)

2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

가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세정 운영

- (영세 소상공인 지원) 부가세·종소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, 영세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 위한 「민생지원 종합대책」 시행

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(26.1.7. 발표) 주요내용

- ① (납부기한 직권 연장)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의 부가세·종소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
- ② (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조정)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을 반영하여 지역기준 점진적 축소
그 밖에, ③부가세 환급금·장려금 조기지급, ④납세담보 면제 확대, ⑤세무검증 유예, ⑥납세소통지원단 신설, ⑦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, ⑧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, ⑨소액채납자 재기 지원 실시

- (세금애로 해소)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공제·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·상담하는 「중소기업·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」 신설
- (민생통계 제공) 지역 경제지표를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신규 공개하고, 청년창업자와 청년정책에 도움이 되는 통계*를 지속 발굴
* (예) 지역별 청년 창업 선호업종, 청년사업자 매출 추이 등을 시각화한 콘텐츠

나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

【기업의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세정지원】

- (수출기업 경쟁력 제고) 관세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·철강·건설업 기업에 납기연장* 등 세정지원 실시
*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(중간예납 2개월)
- (신산업 성장지원) 「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」를 통해 AI,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해 각종 컨설팅 우선 처리 및 전용상담 제공
- (우리 술 육성)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는 「K-SUUL AWARD」 개최를 정례화하고, 수상 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책 수립

【배려와 안내 중심의 세무조사 혁신】

- (시기선택제 전면 시행)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하고, 해당 시기에 조사 착수하도록 개선
- (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도입) 세무조사 중에 반복 적출되는 신고 오류 등 주요 검증 항목*을 사전에 공개하고, 조사 착수 시에도 안내
* (예) 법인(사업용) 신용카드 사적 사용,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등

【 상생 성장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3종 패키지 (최대 2년) 】

- (물가안정 소상공인) 고환율·고물가 속에서 가격인상 자제 등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「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* 조사유예」 신설
* (대상) 행정안전부 등에서 가격·공공성을 심사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(약 10,000개)
- (수출 중소기업) 글로벌 통상환경 재편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「수출 우수 중소기업* 조사유예」 일몰기한 1년 연장 ('25년 → '26년)
* (대상)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% 이상이거나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
- (스타트업 기업) '고용 중심 사회'에서 '창업 중심 사회'로의 전환에 발맞춰 「스타트업 기업(인증기업: 약 10,000개) 조사유예」 적용대상 확대*
* (대상) 사업개시일로부터 ^{현행}5년 → ^{확대}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 벤처기업

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납세자 불편 적극 해소

- (현장의견 상시수집) 자영업자·소상공인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는 세무서 「납세소통전담반」을 신설하여 납세자 불편사항 해결 지원
- (찾아가는 현장소통) 기업 생산현장을 방문¹⁾하고 경제단체와의 간담회²⁾를 실시, 현장의 애로·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
1) 김해지역 수출기업, 포항지역 철강기업, 여수지역 석유화학 협력업체 등(1월 중)
2) 대한상공회의소(3월), 중견기업연합회(5월), 중소기업중앙회(8월) 등 예정

라 글로벌 현장에서 경쟁하는 K-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

- (실용외교 전개) 핵심 주력산업(반도체·이차전지·자동차) 관련 주요 교역국(동유럽·동남아)과의 양자교류를 강화하여 해외 진출 시 세무 불확실성 해소
- (K-문화 선도기업 지원) 뷰티·식품·패션 등 해외에 진출하는 K-문화 선도기업에 대한 상호합의를 우선 추진하여 이중과세 위험 조기해소
- (해외진출 세미나 개최) 해외진출기업 대상 「국제조세 세미나」를 개최하여 이전가격 세무이슈를 공유*하고,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 제공
* 미국·멕시코·인도 등 국제거래가 증가하는 국가에 대한 세정이슈 정보제공 등

3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

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

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전(全) 체납자 맞춤형 징수

- (운영 방향) 국세청 체납분야 인력과 기간제 근로자*로 구성된 「국세 체납관리단」을 정식 출범하고, 실태확인 후 유형별 맞춤형 징수
* 전화실태확인원 125명,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 모집(1.14.~1.20.)에 8,377명 접수
- (운영체계 내실화) 실태확인원 대상 직무·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, 인센티브(격려금·휴가 등)를 지급하여 적극적 업무 유도
- (엄정한 후속조치) 실태확인 결과를 소득·재산정보 등 내부자료와 결합하여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, 유형에 따른 후속조치* 실시
* 생계 곤란형 체납자 → 납부의무소멸, 복지연계 / 고의적 납부기피자 → 정밀분석, 추적조사

나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

- (납부의무 소멸 도입)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¹⁾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²⁾
1) '25.1.1.이전 발생 종소세·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·폐업자(28.5만명, 3.4조원)
2)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(3월 노령 등 신청불가자 직권신청) 후 6개월 이내 결정
- (징수특례 확대)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요건 완화*
* 대상자 : 현행사업자등록자, 취업자 → 확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(예술인, 배달라이더 등) 추가
기준금액 : 종합소득세·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 기준 현행5천만원 → 확대8천만원

다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

- (추적조사 강화)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쏘관서로 확대하고, 지방청 특별기동반을 통한 신속한 현장수색으로 징수역량 제고
* 추적전담반(관서) : ('22) 8 → ('23) 19 → ('24) 25 → ('25) 73 → ('26) 133
- (적극적 공매 집행) 압류재산을 일괄 점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매를 속행하고, 허위 근저당 조사 등으로 조세채권 엄정 관리

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정의 구현

가 202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

- (조사규모 탄력운영) 조사규모*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·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,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
* ('22년) 14,174건 → ('23년) 13,973건 → ('24년) 13,980건 → ('25년) 14,000건 내외
- (공정·상식 기반의 조사운영)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악의적·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검증

나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를 근절

- (공동성장 훼손행위 엄단) 지배주주가 터널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,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점검
 - ▶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리는 터널링 행위
 - ▶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,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누리는 시세조종
- (민생침해 탈세 근절) 서민 대상 불법·불공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거나 생활밀접 업종에서 부당 폭리, 시장 교란 등으로 물가 인상시키는 행위 검증
 - ▶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국민 안전은 무시하며, 사익만 추구하는 악질 사업자
 - ▶ 과도한 가격 인상, 시장 교란행위로 물가 불안을 일으키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악의적 탈세
- (온라인 신종탈세 대응) 가짜뉴스 등 온라인 환경을 교란하는 유튜버 등의 탈루행위를 검증하고, 온라인 신종 업종의 탈세 대응 강화
 - ▶ 허위정보 등 자극적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하는 유튜버
 - ▶ 국민에게 위화감 조성하는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탈세
- (부동산탈세 차단) 강남4구·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, 매매거래 위장·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 집중 조사
 - ▶ 부담부증여 등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채무를 이용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
 - ▶ 쪼개기 증여 등 변칙거래를 통해 감정평가를 회피하는 행위

다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에 대한 전방위 포위망 구축

- (지능적 역외탈세 대응)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다국적기업 엄단

▶ 사업구조 개편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문을 해외관계사 등에 무상이전
▶ 저세율국에 설립한 특정외국법인에 소득을 유보하여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

- (은닉재산 논스톱 대응) 추적조사에서 포착된 해외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공조*를 통해 환수까지 이어지도록 논스톱 대응체계 구축

* 최근 국가 간 징수공조 적극 추진하여 ○○법인의 체납액 471억원 중 338.4억원 환수

- (역외대응 인프라 강화) 신속한 징수공조 이행을 위해 MOU 체결¹⁾을 확대하고,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수단 추가 도입 추진²⁾

1) 아시아 3개국과 체결 완료, 아시아·유럽 주요국 등으로 확대 추진

2)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료를 지연제출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세법개정 건의

라 공익법인 관리 강화로 투명성 제고

- (공시책임성 확보) 결산서류 수정 공시 이력을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재공시 수정 추적시스템을 도입,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 감시 강화

- (공익법인 통계 공개) 기부금을 관리비나 모금비용에 사용하는 비중 등 공익법인의 편법적 재정 집행 관행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보고서 발간

- (검증 강화) 공익자금 부당유출 혐의,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의무위반으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공익법인 집중점검

▶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공익자금 부당유출
▶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을 공익목적 아닌 출연자 특수관계자 수익사업 활용

마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력자 엄단

- (불성실 대리인·플랫폼) 허위·과장광고로 납세자를 호도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 처벌 강화 및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신설 추진

- (미등록 PG) 조직적으로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미등록 PG에 대해 가맹점 매출자료 제출의무* 도입 및 금감원의 고발조치를 위한 명단 제공 추진

* (기존)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맺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G만 제출의무 부여

4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

가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으로 세계최고 AI 국세행정 구현

- (추진 방향) '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'(국정과제 24)을 위해 '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「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」수립 및 추진
 - ① 납세서비스 혁신, ② 공정과세 구현, ③ 세정 효율화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세정 프로세스를 전면 혁신
 - 민감한 과세자료 등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국세청 내부에 GPU 서버를 구축하고, 국세청에 적합한 생성형 AI 모델 도입

연도	추진 전략	추진 과제
'26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ISMP 수립 ▶ AI 시범과제 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예타 관련 절차 진행 후 신속한 ISMP 수립 ▶ 핵심 세부과제 중 중요과제 시범 구축 ▶ 초기 확보한 GPU를 활용하여 홈택스 AI 검색 추진
'27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I 인프라 도입 ▶ AI 핵심과제 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납세서비스 혁신(AI 신고서 어시스턴트,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개발) ▶ 공정과세 구현(AI 체납관리 어시스턴트, AI 탈세적발 시스템 개발) ▶ 세정 효율화(AI 업무지원 시스템,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개발)

- (선도과제 개발) 생성형 AI 챗봇*, 생성형 AI 전화상담,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선개발하여 AI 기반 납세서비스 완성도 제고
 - * (1월) 부가가치세·연말정산 서비스 → (5월) 종합소득세·장려금 서비스

나 AI 시대에도 빈틈없는 정보보안 체계 확립

- (가이드라인 수립) AI 시스템 구축 시 보안위협을 제거하고,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범위 설정, AI 편향*(bias)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
 - * AI가 특정정보 및 특정집단에 대해 불공평하거나 왜곡된 판단을 내리는 현상
- (내부 자료유출 방지) 과세정보 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, 인사시스템과 연동하여 직무에 따른 정보조회 권한 관리 철저

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인프라 강화

- (컨트롤타워 신설) 과세자료 수집, 세원관리 등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조정하는 총괄부서(가칭디지털자산총괄과) 신설 추진
- (관리시스템 마련) 국세청이 수집한 가상자산 정보*를 바탕으로 통합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, 거래추적을 위한 고도화된 프로그램 도입·개발
* 거래소가 제출하는 개인·법인 거래명세서 및 집계표, 블록체인 공시자료(일부) 등
- (역외정보 수집)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제도*(CARF)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 확보, 교환시스템 개발 등 추진
* 암호화자산 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54개 협약국 간 교환('27.9월 최초실시)

라 국가재정수입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

◇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·징수하고 있는 국세외수입* 관리체계를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도록 개편하여 국가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행정 효율성 제고

* 불공정거래 과징금, 환경규제위반 부담금,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

- (준비단 출범) 「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」을 출범('26.1월) 하여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 개시
- (체납관리단 운영) 통합징수 사전단계로,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점검 추진*
* 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국가채권관리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하는 「국가채권관리법」 개정 시
- (징수 일원화)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,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근거 법률인 가칭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을 적극 지원

마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

- (글로벌최저한세 신고) 금년 6월 최초 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간담회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에 충분한 정보 제공
- (가상자산 과세) 가상자산소득 과세시행('27.1.1.)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,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료를 적시 제출하도록 간담회 실시

Ⅲ. 추진 기반

1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중심 문화 정착

- (능력에 기반한 인사) 선호 분야 직원 선발에 실무능력평가를 도입하고, 우수인력 성장지원을 위한 혁신인재 관리체계* 내실화
* 역량평가와 동료검증을 거쳐 선발하고 체계적 보직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
- (성과비례 포상금 지급) 국세공무원의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를 반영한 부과·징수포상금을 신규 도입하고, 승소포상금을 확대
- (중요직무급 확대) 본·지방청 중요 직위에 더해 세무서 격무·기피부서 직원까지 중요직무급 지급을 확대*하여 직무난이도에 따른 보상 합리화
*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 비율 '25년 3% → '26년 15% 목표
- (특별수당 신설 추진) 2만여 국세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세 행정의 전문성,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수당* 신설 추진
* 특별수당 지급범위, 지급액 및 소요재원, 수당신설 필요성 등을 유관부처에 적극 설명
- (BSC 평가체계 개편) 현장과 괴리된 불필요한 지표를 대폭 축소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설계하고, 목표 초과달성에 대한 보상 강화

2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

- (기관차원 직원보호)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'직원보호 전담 변호팀'이 고소·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전담하여 특이민원*으로부터 직원 보호
* 폭언·폭행 등 위법행위나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
- (책임보험 보장확대)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소·고발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의 적용대상¹⁾ 및 보장범위²⁾를 확대
1) 쉰 직원(공무직 제외) → 국세체납관리단 추가
2) 피소·고발 시 손해배상(최대 3천만원) → 업무수행 중 인적·물적 손실보상 추가
- (지역별 구분모집 채용) 강원도 내 7개 세무서에서 근무할 지역 맞춤형 인재 별도 선발('26.1.1.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 주민등록)